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김 일 환*

- I. 서론
- II. 가치법칙: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 III. 중국식 가치법칙의 재해석: 사회주의 상품경제
- IV. 북한식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 혹은 탄력적·실리적 활용
- V. 결론: 북한과 중국의 가치법칙 활용의 차이

국문요약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법칙'은 개혁·개방 또는 체제전환으로 이행하는 이론적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법칙' 연구는 해당 국가 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논문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이론적 근거인 '가치법칙'이 북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가를 논의한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가치법칙의 활용 폭을 확대했다. 가격, 실리, 리윤 등 생산력 강화를 위한 경제적 공간(수단)을 활용하는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조치 취해졌다. 가격조정, 시장개설, 번수입지표 등 개선된 경제관리 방법은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그 긴장상태의 중심에 가치법칙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가치법칙의 전면적 활용 결정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혁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가치법칙의 유연한 해석에 따라 소유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유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 가치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즉, 소유권을 고수하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치법칙'의 해석 범위는 북한 경제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 따라 북한은 국가적·사회적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양상이 어느때 보다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치법칙'은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주제어: 가치법칙, 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 생산수단의 사회화, 사회적 분업, 사회주의 경제개혁, 전환불황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시간강사

I. 서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가들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의 경우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변화시키는 원천이 된다. 사회과학과 사회현실은 상호 규정적이며, 사회현실은 사회과학을 통해 ‘진정한’ 사회현실로 승인받는다.¹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론적 규범이 바로 가치법칙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제도와 양립 가능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만큼 가치법칙은 민감하다.

사회주의 체제도 가치법칙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는 과도기론이며, 이론적 설득력 또한 매우 강하다. 그러나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가치법칙이 가진 내적 갈등의 원초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주의 제도와 가치법칙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체제 내에서 충돌할 경우, 그래서 자본주의의 ‘맹목적성’이 승리할 경우, 사회주의 체제는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적 갈등의 근원이다. 그만큼 가치법칙은 폭발적이다.

논문은 가치법칙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북한 내부의 정책갈등과 긴장 관계를 추적한다. 가치법칙의 이론적 재해석, 활용범위, 정책으로의 전환 등과 관련된 논쟁은 매우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7·1조치 이후 활용범위와 정책으로의 전환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논문은 또한 중국의 가치법칙 논쟁과 진행과정을 북한식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식 경제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검토한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 전 시기부터 가치법칙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내부 논쟁은 가치법칙이 개혁·개방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즉, 중국식 ‘사상해방’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¹ 북한의 경제학은 북한의 경제현실과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북한의 사회현실로부터 규정되는 북한체제의 이념·목표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현실과 북한체제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고찰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박순성,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동아연구』, 33집 (1997), pp. 261-263.

II. 가치법칙: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 노동의 직접적인 사적 성격 - 생산의 무정부성 - 직접적인 사적 생산 = 상품생산 → 시장경제라는 논리계열”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 노동의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 - 사회적 생산의 계획성 -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 = 비상품생산 → 비시장경제라는 논리계열”²을 대응시킨다. 따라서 발달한 자본주의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공산주의로의 이행에서 가치법칙, 상품·화폐 관계는 급격히 소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진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생산력 발전의 과제가 크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시장기구 및 상품경제를 급격히 철폐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레닌은 1920년대 시장을 활용하는 신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가치법칙 활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30년대 급진적 공업화와 집단농장화 등 국가차원의 사회주의 제도 수립에 따른 ‘사회주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계획경제를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동일시하고, 가치법칙의 작용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서 1935년 소련의 경제학자 보즈네센스키는 「소비에트 화폐에 관해서」라는 논문을 통해 “상품거래가 소비에트 화폐의 존재의 기초이다. 화폐의 필연성은 전개된 소비에트 상업의 필연성과 필요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³ 이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상품·화폐의 지위와 의의, 그에 대한 가치법칙의 역할과 작용 및 중앙집권적 계획화의 결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1951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경제학 토론회를 개최해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에 대해 논의했고, 1952년 스탈린은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를 통해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차이로 인한 거래로써 사회주의 상품생산의 필연성을 제시하며 전인민적 소유가 확고히 될 때 사라진다는 가치법칙의 한시적 활용을 승인하기 이르렀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수용했던 스탈린식 중앙집권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실질적 경제성장의 저하로 나타나자, 사회주의 경제에 시장도입을 주장했다. 시장사회주의 이론을 가장 먼저 이론화한 폴란드의 브루스

² 퇴경연구실 편, 『현대사회주의경제의 쟁점과 전망』 (서울: 풀빛, 1991), p. 30.

³ L.I.아발킨 외 지음, 배손근 옮김, 『현대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서울: 태담, 1989), p. 200.

(W. Brus)는 계획과 시장의 양립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모델에 대비되는 시장을 이용한 분권적 계획모델을 제시했다.⁴

결국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에서 출발하여 등가교환을 실현하는 가치법칙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다.⁵ 가치법칙에서 말하는 ‘가치’는 상품의 교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 즉,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가치 정의는 “사용가치는 오로지 사용되거나 소비됨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지만, 교환가치는 양적관계 즉 하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나며 이 비율은 때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교환가치는 우연적이고도 순전히 상대적인 것”⁶이라 설명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경제체제-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서는 개별 생산주체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교환되어도 교환가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⁷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는 국가 소유, 협동단체 소유, 개인 소유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주체가 다양한 상태에서 사회적 분업을 통한 생산물의 교환은 필연적으로 교환가치로 외화(externalization) 될 수밖에 없다.⁸

하지만 생산물에 내재된 사용가치와 교환과정에서 외화되는 교환가치의 일치성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일치성을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라는 추상적 노동의 범주를 통해 실현하려 했지만,

⁴ 퇴경연구실 편, 『현대사회주의경제의 쟁점과 전망』, p. 50.

⁵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가치법칙과 관련된 인식은 1941년 이전까지의 ‘부인’(否認)단계에서, 1950년대 중반이후 완전한 ‘거부’(拒否)에서 열광적인 ‘지지’(支持)까지 광범위한 범위로 논의가 진전되었다. Wilczynski, J.,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 Allen & Unwin, 1982), pp. 129-130

⁶ Karl Marx, *Das Kapital* (MEW, 1867), pp. 50-51; 칼 마르크스, 강신준 옮김, 『자본 I-1』 (서울: 길, 2008), pp. 88-89 재인용.

⁷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407. ‘사회적생산의 발전과정에 사회적분업이 아무리 심화발전되어도 소유가 분화되어있지 않고 소유형태가 단일한 경우에는 상품생산이 있을수 없다.’

⁸ 위의 책, pp. 415-426. 리기성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가 갖는 과도적 성격 탓에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형태’적으로 발생하고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 형태적인 상품화폐관계, 가치형태, 화폐적형태, 상업적형태 등 가치법칙은 ‘형태적’을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매개 단위들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경제지도관리의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구체적 노동으로 접근할수록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지나는 추상적 모호성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 속에서 대공업에 기초한 전국적 계획의 발전이 이루어져 사회주의에서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은 전국적 회계 수준은 커녕 단일 공장에서의 공정한 노임측정, 원가계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미숙한 계획당국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는 잉여가치가 어떻게 기존의 교환가치와 비교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용가치의 발명과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즉 효용의 크기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만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할 때 나타나는 창조적 욕구의 저하 문제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문제를 생산력의 실질적 향상 문제와 연관시켜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를 계획보다는 시장의 조절작용으로 해소하려 했다. 즉, 가치법칙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시장의 허용과 그에 대한 생산단위의 잉여가치 결정(순소득, 나아가 이윤 결정), 즉 가격 결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배리를 인정했지만, 국가 계획중심의 생산력 발전 방법을 선택했다. 국가 당국이 인민의 수요를 예측해 시장에서 사치품의 교환가치는 사용가치보다 높게, 생필품의 교환가치는 사용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며, 이윤율의 크기도 낮게 정하는 등의 가격정책을 전개했다. 이는 가치법칙의 작용을 소극적으로 ‘형태적’ 활용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적 분업과 소유관계의 분화에 따라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사회적 분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의 사용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인정하느냐, 즉 그것의 교환가치인 생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특히, 이윤의 폭)이 개별 생산주체에게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치법칙의 활용도 및 범위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법칙의 활용 폭은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개념인 것이다.⁹

가치법칙의 실질적 활용은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과 가격 결정권으로 발전하여 실질적 소유권 이전효과까지 낳게 한다.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의 주체가 기업이나 개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⁹ 중국은 개혁·개방의 이론적 근거로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을, 유고슬라비아는 ‘노동자자주관리제’, ‘유고슬라비아형 시장사회주의’를 채택했다.

것이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원의 분배가 계획당국이 아닌 시장에 의해, 즉 가치법칙의 조절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법칙은 체제전환의 이론적 배경이자 근거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내부에서 전개된 ‘가치법칙’의 재해석 작업은 그래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개혁·개방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던 중국과 경제정상화의 수단이 절실했던 북한의 ‘가치법칙’¹⁰ 재해석 작업은 북한과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가치법칙에 대한 인식은 결론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또한 매우 다르다. 중국은 가치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로는 새로운 생산력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인식은 다르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¹¹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기본법칙이다.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가치법칙의 작용을 여타 경제법칙의 작용과 분리시키는 것은 오류다. 그것들은 상호침투하며 상호제약적이다. 가치법칙은 시장기제를 통해 작용하며 시장기제와 계획기제 또한 상호침투하며 상호제약적이다. 중국의 계획경제는 상품경제에 기초한 계획경제다.¹²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경제법칙이다... 가치법칙의 작용은 사회의 구체적조건에 따라 작용범위와 성격, 역할과 사회경제적결과가 같지 않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은 제한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진행되는곳에서는 내용적으로 작용하지만 상품이 아닌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분야에서는 형태적으로 작용한다... 가치법칙은 역사적인 성격을 띤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상품생산이 없어지게 되며 가치법칙의 작용도 없어지게 된다.¹³

¹⁰ 북한의 가치법칙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임강택, “사회주의 경제의 가치법칙 연구: 북한의 가치법칙을 중심으로,” 『민족발전연구원 논문집』, 1998. 참조.
¹¹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제4편 참조.
¹²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정광수 역,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서울: 과학과사상, 1990), pp. 20-21.
¹³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20-21.

III. 중국식 가치법칙의 재해석: 사회주의 상품경제

1. 중국의 가치법칙 논쟁과 소유권의 변화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 지도부의 목표는 “공산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통하여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을 “발달하지 못한 사회주의 나라로부터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적 현대화나라로 전변”시키는 “새 혁명”을 일으킬 것을 선언했다.¹⁴

“생산력을 구속하는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변”의 핵심은 가치법칙의 전면적 활용을 통한 상품·화폐관계의 개혁이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의 경험을 살려, 1984년 가치법칙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체계화하고 실현시켰다.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1984년 10월, 12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하 ‘결정’)¹⁵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초위에 건립된 계획적 상품경제라고 지적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차이가 ①소유제의 상이함, ②착취관계의 존재여부, ③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됨 여부, ④생산의 목적, ⑤가치법칙의 전(全)사회적 운용 여부, ⑥상품관계 범위의 상이함¹⁶ 등 여섯 가지이며 중국 사회주의를 ‘계획적 상품경제’로 규정했다.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마홍(馬洪)은 중국의 계획적 상품경제의 이론적 근거인 가치법칙의 계획적 활용의 근거를 “생산력 발전 수준이 낙후된 기초위에서 생산수단의 단일한 전민소유제의 건립 불가능성”¹⁷에서 찾고 있다. 즉,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소유권의 전일적 체계 구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품경제를 계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획과 가치법칙의 관계에 대해서는

¹⁴ 강택민,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의 속도를 다그쳐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위업의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14년간의 위대한 실천에 대한 기본총화,” 『당 건설에 대하여』 (북경: 민족출판사, 2002), pp. 53-54.

¹⁵ 1984년 ‘결정’은 『世界週報』, 1984년 11월 20일, 27일 양일간 게재. 강인덕 편, 『개혁과 개방-중국주요논문선집』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355-389. 주요내용으로는 개혁의 당위성, 역동적 사회주의경제체제, 기업활력 제고, 가치법칙의 의식적 운용,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행정과 기업의 직책분리, 경제책임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 관철, 대내외경제기술교류 강화, 세대 인재양성, 당의 개혁진전 보장 등이다.

¹⁶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p. 36.

¹⁷ 그는 상품경제의 계획적 이용이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서 긍정과 부정 양측면의 경험을 총괄하고 또한 국제적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참고하여 얻어진 과학적인 결론이며,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공헌임을 자처하고 있다. 위의 책, 참조.

“지령성계획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가치법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가치법칙의 조절작용은 또한 “모종의 맹목성(완전시장화)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적 지도와 조절 그리고 행정적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가치법칙과 상품경제에 대한 논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영향하에서 ‘대체론,’¹⁸ ‘제한론,’¹⁹ ‘자유분방성 제거불가론’²⁰ 등 보수적 견해들이 중국 경제를 지배²¹해왔지만, 가치법칙의 적극적 활용론 역시 이미 1950년대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다. 모택동은 1959년 「가치법칙은 위대한 학교」라는 저술을 통해 “가치법칙은 하나의 위대한 학교이며 그것을 이용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수십만 간부들과 수억 인민들을 가르쳐 우리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의 대표적인 경제 개혁론자인 손야방(孫冶方)²²은 기존의 경제이론을 비판하면서, 1956년 『경제연구』에 발표한 「계획과 통계를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 놓자」라는 논문에서 가치법칙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대립시키는 관점을 비판했다.

사회적 평균필요노동량에 대한 인식과 계산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는 가치법칙의 이러한 중대한 작용은 우리 사회주의 경제에서 배척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계획적 비례적(균형적, 필자) 발전은 반드시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가능하다.²³

이 논문이 “수정주의적 관점을 선전한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 「가치론」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정치경제학에서 ‘가치’라는 범주의 지위를 크게 제고 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주장했다.²⁴

¹⁸ 사회주의적 개조의 기본적 완성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과 계획적 발전법칙의 조절작용이 가치법칙의 작용을 대체하게 된다는 주장.

¹⁹ 국가의 계획관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치법칙의 작용 범위는 끊임없이 제한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

²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가치법칙은 그 ‘자유분방성은 제거되기 어려우며’ 그것에게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

²¹ 위의 책, p. 167.

²² 손야방에 대해서는 위의 책, p. 168 참조.

²³ 위의 책, p. 168.

²⁴ 손야방, “가치론,” 『사회주의 경제의 약간의 이론문제』 (북경: 인민출판사, 1979), p. 136;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p. 168 재인용.

상품경제와 가치법칙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현실에서의 적용문제가 대립하면서 가치법칙의 작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중국 당국 차원의 해법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서였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시기의 “계급투쟁을 근간으로 하는 슬로건과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계속혁명론”이 부정되고, “공작의 중심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이행”시키기 위해 “경제관리 체제와 경영관리방법을 진정으로 개혁”해야 하며 “가치법칙의 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가치법칙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과감한 사회주의적 적용은 다음과 같은 국가차원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치법칙의 작용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무시함으로써, “중국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간 동안 좋지 못하였으며 이는 두 측면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기술진보가 경시되고, 경제활동의 효율이 낮으며 그리고 소모는 많고 낭비가 컸다. 다른 하나는 비례적 조화가 파괴되었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제품은 기호에 맞지 않았다. 대량의 물자가 부족했음과 동시에 어떤 물자는 적체되고 있었고, 고도성장은 일시적이었을 뿐 지속되지 못했으며, 경제발전의 기복이 대단히 심했고, 정상적인 비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종종 매우 커다란 대가”²⁵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함께 ‘결정’을 통해 중국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품과 상품경제 그리고 가치법칙의 적극적인 활용 방법을 이론화한 ‘사회주의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이론과 현실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농촌지역 인민공사의 해체였다. 인민공사의 해체과정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79년부터 농업생산 청부책임제가 도입되었다. 사적 토지소유는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토지를 장기임차한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되기 시작했고, 농민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자율성은 높아졌다.²⁶ 농업분야와 함께 2대 생산부문인 공업부문에서는, 국가 소유자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서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인 국영기업’을 사회의 ‘기본 경제단위’로 규

²⁵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p. 171.

²⁶ “1978~84년에 농가의 연 수입이 평균 2.4배(고정가격)나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 1988년 말까지 곡물 37%, 원면 93%, 사탕수수 121.8%, 가축 34%, 노동생산성은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게나니 추프린, “경제발전전략: 소련/러시아, 중국, 북한의 농업집단화 비교연구,”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pp. 36-37.

정함으로써 가치법칙활용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²⁷

2. 중국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관리방식의 분리, 변용 및 현재적 결과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관리방식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생산수단의 집체적 소유와 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가치법칙의 탄력적 적용과 상품 교환이라는 관리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생산력 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한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소유권)와 관리방식(경영권)의 분리 적용에 대해 마홍은 “국가는 막대한 경제력과 최고결정권을 가지며,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계획적 영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수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렛대(經濟槓杆)²⁸를 운용하고 행정적 방법과 경제적 수단이 상호 결합된 강력한 조절체계를 건립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계획기관은 사상적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결정’에서 제기된 것처럼 지령성계획으로 조절되는 경제만이 계획이라는 진부한 관념을 타파하고, 계획공작의 중점을 지령성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사회경제발전의 전략적 방침, 경제정책, 조절조치의 수립으로 점차 진화하며, 각종 경제정책, 경제지렛대를 운용하여 전체 국민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힘써 거시경제 관리를 잘 하면서 계획 목표와 계획 임무의 실현을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계획 관리체제 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²⁹

가. 시장과 계획에 대한 실용적 입장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 국민경제의 계획적·비례적 발전법칙의 조절을 받는 것이며, 가치법칙은 계획의 근거가 아니라는 계획관에 대해 마홍의 비판은 단호했다.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사회주의 경

²⁷ 강인덕 편, 『개혁과 개방-중국주요논문선집』, pp. 355-389 참조;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pp. 134-140.

²⁸ 이는 경제적 수단을 말한다. 예컨대 가치, 가격, 원가, 이윤, 임금, 장려금, 세금 등이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적공간’ 등을 사용한다. 경제적공간은 “가격, 원가, 리윤, 상금과 같은 경제범주들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계산, 자극, 추동하는 기능을 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10.

²⁹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pp. 51~52.

제는 계획적이고 비례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민경제 계획이 가치법칙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계획의 기본내용은 마르크스의 ‘노동시간의 사회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이 각종 노동직무의 각종 수요와의 적절한 비례를 조절’하는데 있는 만큼 ‘사회 총노동시간 중…필요한 비례량만을 상이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사회주의 생산의 비례적 발전이 보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계획의 실현과정에서 ‘시장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시장기제가 가격과 공급·수요관계의 변화에 따라 생산과 유통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이자 형태인 만큼 이를 활용하면 첫째, 기업이 사회적 수요에 따라 생산을 할 수 있고, 둘째, 엄격한 경제채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셋째,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³⁰

1989년 천안문 사건과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개혁·개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992년 선전, 상하이 등을 시찰하는 ‘남순강화’를 통해 등소평은 시장과 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은 경제수단일 뿐이며 계획이 많으나, 시장이 많으나 하는 점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적 구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³¹ 사실 중국 당국은 계획과 시장에 대한 실용적 입장에 기초하여 이미 개혁·개방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종합적 균형’을 계획보다 시장에서 찾았다. 마홍의 설명은 계속된다.

왜 종합적인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제1차 5개년계획(1953~57)³²이후 우리는 매년 종합적 균형을 외쳐왔는데 왜 아직도 왕왕 경제적 비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수차례 비례적 조화가 파괴되기까지 하였는가? 실천이 증명하듯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제공작에 몇 차례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경제적 비례가 조화를 상실하여 실현문제에서의 모순이 더욱 가중된 것은 그 근본원인이 결코 계획조절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계획공작을 경시하였던 데 있지 않으며 중국이 실행한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내재적 연관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다.

³⁰ 위의 책, pp. 181-185.

³¹ 류상영 외, 『국가전략의 대전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p. 273.

³² ‘과도시기의 총노선’(모택동) 목표로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설정했다. 그 결과 농·공업의 연평균 성장률 11.9%, 그 중에서 공업 연 18%, 농업 4.5%, 경공업 연 12.9%, 중공업 25.4%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자본집약적인 공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노동력 활용, 실업문제,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 해결방법은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시장의 성질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상품경제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사유제에 기초한 자본가의 잉여가치 실현에 복무하지만, 사회주의 시장은 공유제에 기초한 상품경제에서 출발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과정에 복무”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계획경제 체제하의 균형문제 즉,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I 부문과 II 부문의 균형 역시 시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축적기금이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야 하며,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소비기금 역시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전화되지 않는다. 더불어 I 부문과 II 부문간의 생산물 및 생산수단의 교환 역시 사회주의 상품경제 시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결합”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홍은 그 이유를 시장의 역할과 기능에서 찾고 있다. 시장은 “첫째, 수요가 생산을 결정”하며, “둘째, 사회주의적 재생산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온도계’ 역할”을 하는 동시에 “셋째, 각종 경제활동의 효과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품생산자의 무분별한 임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는 각종 경제적 규제를 포함하는 법률적·행정적 수단, 임금·이윤·가격 등의 경제지렛대를 이용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시장을 조절·통제”함으로써 “계획이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 전체 이익과 국부적 이익의 관계를 정확히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³

나. 공유제에 기초한 상품경제의 실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적 성장³⁴

사회주의 상품경제이론에 근거한 중국의 실험은 현실에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으로 나타났다.³⁵ 공유제에 기초한 상품경제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을까? 최근 중국 경제의 주목할 구조적 변화 사례를 정리하면 우선 <표 1>과

³³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pp. 202-212.

³⁴ 김정호, “중국 사회주의 이해와 전망,” 『활동가 북경위크숍』 (새세상연구소, 2011), pp. 54-66 참조.

³⁵ 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드러난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논외로 한다.

<표 2>와 같다.

<표 1> 1998~2006년 중국 국유공상기업 관련 몇 가지 지표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유기업수 (만 개)	23.8	21.7	19.1	17.4	15.9	14.6	13.6	12.6	11.9
자산총액 (억 원)	134,780	145,288	160,068	179,245	180,219	199,971	215,602	242,560	290,000
매출액 (억 원)	64,685	69,137	75,082	76,356	85,326	100,161	120,722	140,727	162,000
직공 (만 명)	6,394	5,998	5,564	5,017	4,446	3,067	3,660	3,209	

출처: 김정호, “중국 사회주의 이해와 전망,” 『활동가 북경위크숍』 (새세상연구소, 2011), p. 58; 원자료는 인민출판사, 『17차 당대회 보고 참고독본』 (북경: 인민출판사, 2007), p. 167.

<표 2> 사영기업과 개체(자영업)의 발전현황(1992~2006년)

	수량(만 개)		인원(만 명)		등록자금(억 원)		영업액(억 원)	
	사영	개체	사영	개체	사영	개체	사영	개체
1992	13.9	1,533.9	231.9	2,467.7	221.2	600.9	113.6	2,238.9
1995	65.5	2,528.5	956.0	4,613.6	2,621.7	1,813.1	1,499.2	8,972.5
2000	176.2	2,571.4	2,406.5	5,070.0	13,307.0	3,315.3	9,884.1	19,855.0
2002	243.0	2,377.0	3,409.0	4,743.0	24,756.0	3,782.0	14,369.0	20,834.0
2005	430.0	2,464.0	4,714.0	5,506.0	61,475.0	5,809.0	30,373.0	26,239.0
2006	497.4	2,576.0	6,395.5	7,500.0	75,000.0	6,517.0	34,959.0	25,489.0

출처: 김정호, “중국 사회주의 이해와 전망,” p. 58.

국유기업 숫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 현재 11.9만 개로 축소되었지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 질적지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사영기업은 497.4만 개, 자영업은 2,576만 개로 성장했다. 사영기업과 자영업은 기업수의 증가와 함께 자본금, 매출액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유기업 주도하의 사영기업이나 자영업이 동반해서 꾸준히 성장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품경제의 확산에 따른 사적영역의 무분별한 성장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2006년 기준 매출액 규모에서 국유기업이 16조 2천억 원, 사영기업

이 3조 4,959억 원, 자영업이 2조 5,489억 원으로, 기업체 총 매출액 대비 국유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72.8%를 점유하고 있다.

<표 3> 중국 소유제형태별 각종 과학기술활동 관련지표 (2004년)

	전체규모 이상 공업기업	국유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과학자 및 엔지니어(명) 비중 (%)	1,064,329	587,152	111,019	126,415
	100	55.2	10.4	11.9
R&D 경비지출(만 원) 비중 (%)	11,045,509	5,413,275	845,384	2,995,041
	100	49	7.7	27.2
발명특허수(건) 비중 (%)	30,315	9,244	6,486	6,581
	100	30.5	21.4	21.7

출처: 김정호, “중국 사회주의 이해와 전망,” p. 63; 원자료는 중화공상연합출판사, 『중국사영경제연감 2004~2006』 (북경: 중화공상연합출판사, 2007), pp. 379-384.

더불어 국유기업의 경쟁력은 R&D 투자, 노동생산성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만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R&D 투자액 규모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9%로 외자기업에 비해 2배 가까운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 국유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자기업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은 국가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증명하기 충분한 것이다.

<표 4> 전국 국유기업 및 규모이상 비국유공업기업 주요
경제효율성 지표 비교

	국유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총자산공헌율 (% ³⁶)	노동생산율 (원/1인, 년간)	총자산공헌율 (%)	노동생산율 (원/1인, 년간)	총자산공헌율 (%)	노동생산율 (원/1인, 년간)
1998	6.51	29,054		31,693	6.76	52,311
1999	6.77	35,741		35,208	7.93	61,260
2000	8.43	45,998		38,060	9.76	71,403
2001	8.17	54,772		40,154	9.83	75,913
2002	8.71	65,749		44,424	10.46	81,313
2003	10.09	87,095		52,342	11.46	92,158
2004	12.13	117,641		54,704	11.94	86,828
2005	11.87	144,954	13.85	75,976	10.55	107,748
2006	12.92	180,648	14.95	95,057	11.52	120,607

출처: 김정호, “중국 사회주의의 이해와 전망,” p. 63; 원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각 년도).

또한 2007년 국유기업이 전체 공업생산의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업기업 중 기업실현 이윤과 납세액에 있어서 각각 40%와 50%를 차지했다. 이는 국유기업이 매출액이나 실현이윤 이상의 납세공헌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는 공유제라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기초한 유연한 시장경제적 관리방식의 성공적 적용 사례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IV. 북한식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 혹은 탄력적·실리적 활용

1. 과거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의 활용

지난 기간 적지 않은 경제지도 일군들이 가치법칙을 이용하는데서 이리저리한 편향을 나타내었습니다. 경제지도 일군들이 한때에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을 무시하고 그것을 리용하지 않았으며 당에서 이것을 비판하자 그 다음에는 가치법칙을 망탕 적용하여 경제관리운영에서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지도 일군들이 가치법칙을 잘못 적용한데 대하여 당에서 비판하

³⁶ 총자산공헌율 = (이윤+세금+이자지출) ÷ 연평균자산

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가치법칙을 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3.2.1))³⁷

사회주의의 과도적 성격이라는 전제 아래 가치법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기별 활용에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개별적 전문성, 합리성, 효율성보다 집단주의적 혁명성, 정치성을 우선하는 계획경제 체제였다. 자기 완결적인 재생산구조를 추구하는 자립경제노선은 생산력 발전 그 자체보다 자주국방, 민족 자주성과 같은 정치·사상·군사 우위의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그동안 “투자 효율성이 낮더라도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 실현하는 방향에서 경제를 운용”³⁸해 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추진된 중공업우선의 농업·경공업 동시발전노선은 수익성 원칙, 실리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책은 아니었다.³⁹

그러나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위기 해소방안을 둘러싼 당내 정책 갈등의 중심에는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⁴⁰ 정책 갈등의 기본 축은 계획과 시장, 자립과 개방, 집단적 합리성과 개별적(개인적)합리성, 혁명성·이데올로기성·노동계급성과 전문성·합리성·효율성·과학성의 문제로서, 실용주의 개혁 노선과 이데올로기(혁명주의) 보수 노선의 대립이었다. 즉 ‘생산관계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생산력주의’와 그 ‘자체로서의 생산력주의’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이태섭⁴¹은 1990년대 북한의 정책 갈등이 3단계를 거쳐서 정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1단계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위기가 점차 심화되면서 생산력 발전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이 고개를 들던 1993년까지이다. 제2단계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로서, ‘혁명적 경제전략’으로의 정책전환, ‘고난의 행군’에 따른 실용주의적 개혁 노선이 확산

³⁷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120-121.

³⁸ 리명서, “사회주의 재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규정하는 지표들과 그 리용,” 『경제연구』, 199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5.

³⁹ 리명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한 물질적 기초,” 『경제연구』, 1998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9. 북한은 스스로 “수익성이 보다 높은 것은 경공업”부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⁴⁰ 북한의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에 대한 경직적 고수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⁴¹ 7·1조치 이전까지의 북한의 가치법칙 논쟁과 관련해서 이태섭은 199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전개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노선의 갈등과 전개과정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서울: 선인, 2009), pp. 291-320 참조.

되고 정책갈등이 고조되어 가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1998년 이후 시기로서, 선군 정치를 통해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을 제압하고, 강성대국론과 ‘혁명적 경제정책’을 통해 전통적 정책노선을 기본축으로 체제를 정비해 나가던 시기로 정리하고 있다.

유례없는 경제난에 직면해서 북한 당국은 실용적 경제관리 노선과 전통적인 계획관리노선을 넘나드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 노선의 혼란 과정은 7·1조치라는 2000년대식 경제노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7·1조치 전후의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의 활용

가. 경제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한 가치법칙의 활용

기존의 경제정책이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7·1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경제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7·1조치 전후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는 3가지 영역에서 현실화되었다. 먼저, 경제 관리에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 계획화사업에서 중앙과 지방,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계획지표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셋째, 물질적 자극과 정치·도덕적 자극의 배합을 위한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⁴²하는 것이었다. 즉, ‘경제적효과성’과 ‘실리’라는 경제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하에 경제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경제적효과성,’ ‘실리’라는 분명한 목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계획이나, 시장이나 등 생산관계를 대립시켰던 1990년대의 가치법칙 논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변화된 환경’과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곤란과 시련’이 ‘경제적효과성’과 ‘실리’를 꺼내든 계기가 된 것이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겪어야 하였던 ‘곤란과 시련’을 이겨 내고 우리의 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고…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투쟁”⁴³이며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 완성하는것은…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⁴⁴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⁴²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2003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13-14.

⁴³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원칙적문제,” 『경제연구』, 200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2.

⁴⁴ 천영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2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9.

지난 시기에는 비록 뒤떨어 진것이라고 해도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 받아 들였지만, 실리를 보장하면서 자력갱생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실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것이라고 해도 그만두어야 한다. … 변천된 오늘의 조건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게 버릴것은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⁴⁵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2002년 이전의 북한의 공식적인 논의와는 다른 북한식 경제관리방식의 ‘혁명적’ 변화로 받아들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⁴⁶ 나아가, 7·1조치 이후 전개된 각종 제도 개선, 즉 경제관리 방식의 전환적 개선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현상들에 대해 당이나 내각 혹은 경제학계의 이론적인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경제관리 방식 개선의 이론적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김정일의 ‘종자론’까지 거론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종자론을 구현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완성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라는 사상을 새롭게 밝혀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결국 경제실리보장을 위한 활동”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⁴⁷ 이른바 중국식 ‘사상해방’을 연상케하는 장면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경제적 효과성과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관리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경제단위들의 이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경영활동에서의 평가지표가 기존의 양적지표인 현물중심에서 질적지표인 번수입지표, 사회순소득지표로 대체되거나 혼용되기 시작했다. 가치법칙의 확대적용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나. 리윤, 번수입, 사회순소득 지표의 강조

“사회주의적 생산의 효과성기준을 리윤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⁴⁸하며, 또한 “리윤본위제는 사람들에게 개인리기주의를 조장”⁴⁹하고, “리윤지표를 만능지표로

⁴⁵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원칙적문제, p. 3.

⁴⁶ ‘실리’라는 개념의 도입과 사용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김진환, 『북한위기론』 (서울: 선인, 2010), p. 494;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종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pp. 176-177.

⁴⁷ 박선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완성에 관한 독창적리론,” 『경제연구』, 2005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3.

⁴⁸ 한득보, “사회주의적 생산의 집약적 발전에서 생산의 효과성 범주,” 『경제연구』, 1992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10.

삼으면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사용가치증대에 기여할수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⁵⁰가 될 것이라는 1990년대식 ‘리윤’에 대한 적대적 평가는 ‘실리주의’ ‘실리보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기업의 경영평가 지표로 거듭났다.

실리보장에서 일군들이 경제적공간을 틀어쥐는 것은 원가와 가격, 리윤 등을 정확히 따지면서 타산을 바로하여 원가를 낮추고 리윤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실현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¹

돈에 의한 계산을 바로하여야 인민경제부문별로나 전국가적으로 경제관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계산평가할수 있으며 투자에 비하여 얼마만한 실리를 얻었는가를 따져보고 경제발전을 위한 대책을 더 잘 세워나갈수 있다.⁵²

북한이 지난 시기 기업소 경영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현물중심의 계획목표 달성을 강조했다면, 2003년 ‘변수입’ 제도의 도입은 현물중심의 계획달성과 함께 기업소 경영활동을 ‘화폐적 형태’로 의 전환을 의미했다. 기업소 경영활동이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변수입 제도 도입의 목적은 첫째, 원가절감과 판매수입의 증대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 경영효율의 강화이며, 둘째, 변수입지표가 생활비의 크기를 결정케 함으로써 물질적 자극으로 작용시키기 위함이며,⁵³ 셋째, 국가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⁵⁴

개념적으로 변수입은 ‘자기를 위한 생산(생활비, 임금)’과 ‘사회를 위한 생산(순

⁴⁹ 박경옥, “리윤본위를 배격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996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50.

⁵⁰ 리명호, “경제관리와 경제제도의 련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 견해의 반동성,” 『경제연구』, 1998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50.

⁵¹ 리상우, “상업의 최량성규준과 그 리용,” 『경제연구』, 1999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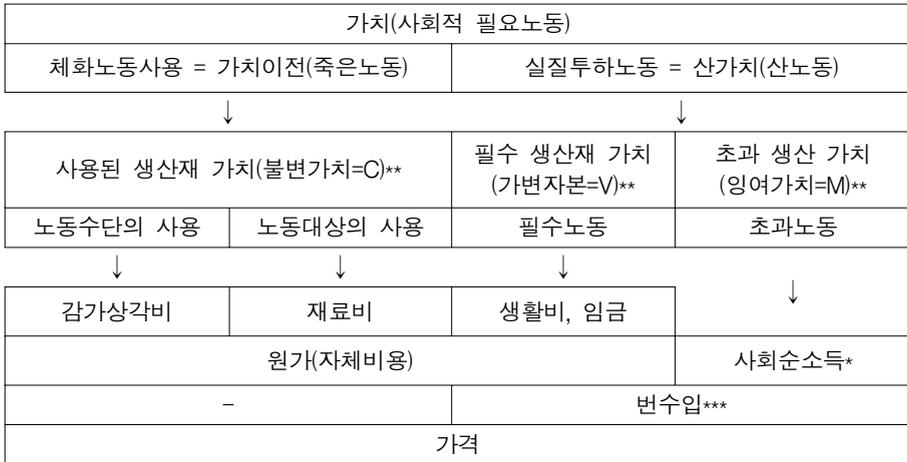
⁵² 당력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 329-332.

⁵³ 변수입은 매출액에서 원가(생활비 제외)를 제외한 몫이므로 원가를 낮출수록 변수입은 증대하게 된다.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39-43. “변수입을 늘이는데서 생산수단에 대한 절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제품판매총수입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몫이 거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⁵⁴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변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200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39-41. 변수입은 국가예산납부와의 관계도 반영한다. 국가납부 몫의 장성은 그만큼 변수입의 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득)’을 합한 지표로 계획영역의 현물지표를 달성한 조건에서, 변수입과 ‘생활비’는 비례관계지만 ‘사회순소득’과 ‘생활비’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상태로 설계된 정책이었다.⁵⁵

<그림 1> 북한의 가격과 가치체계, 변수입·사회순소득의 구성



출처: 배진영, 『구동독의 가격체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서울: KIEP, 1991), p. 18.

주. 사회총생산물의 가치 = C + V + M = 원가총액(C+V) + 사회순소득(M)

* 사회순소득(M) = 국가의 중앙집중적 순소득(국가기업리득금) + 기업소 순소득(기업소 자체총당금)

** C =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

V =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

M =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 국가기업리득금의 원천

*** 변수입, 기업소단위: 순생산액, 전사회적범위: 국민소득

다. 계획·시장·가격의 결합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영역은 바로 시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시장 형태의 비조직시장에서 계획가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가격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 더불어 비조직시장에서 성장하는 상업자본가들의 문제는 또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리용’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

⁵⁵ 2007년 이후 북한은 ‘변수입’이라는 용어를 대체해서 ‘사회순소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회순소득에 대한 분석은 김일환,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p. 35-37 참조.

고 있는 영역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시장’을 꺼내든 목적은 결국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붕괴된 생산기반을 재구축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 때문이었다. 과거 농민 시장에 대한 단속과 목인이 교차했던 시기의 시장에 대한 활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다. 생산주체의 자발적 동력, 생산의 정상화, 상품공급의 확대 및 정상화라는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이다. 선순환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비조직시장 즉 농민(종합)시장을 활용한 조직시장의 정상화였다.

2003년 3월 공식화된 시장⁵⁶은 소비재시장을 넘어서 생산수단유통시장으로까지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2001년 자재공급의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수단 유통시장을 허용하면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제도’보다는 ‘생산성(생산력, 생산정상화)’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더욱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 소비재시장보다 자재공급을 위한 물자교류시장이 먼저 공식화된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여기서 2003년 ‘5·5조치’⁵⁷가 가진 북한 당국의 의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시장설치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시장을 끌고 갈 주체들이 모두 부담⁵⁸하고, 종합시장내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도 시장에 참여⁵⁹하고, 운영이 정지된 국영상점을 무역회사에 맡겨 운영하고, 매대 사용료와 판매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를 국가 영역으로 흡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마련하여 놓은 상업시설을 보다 선진적으로 개조하는 한편 현대적 상업시설을 창안도입하고 … 상업기술수단의 개조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의 현대화, 문명화를 실현하고 상품유통에서 높은 경제적효과를 달성하고 실리를 보장하자는데 의의가 있다.⁶⁰

⁵⁶ <내각결정 제24호> 종합시장설치 지시문; 1998년 개정헌법은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24조)’고 규정, 터밭경리 주체를 ‘개인’(1992년 헌법은 터밭경리 주체를 ‘협동농장원들’(24조)로 제한)으로 확대했다. 그 연장선에서 김정일의 2001년 10·3담화, 2002년 7·1조치, 2003년 5·5시장설치 결정이 이어졌다.

⁵⁷ <내각결정 제27호> 시장관리운영규정, 2003년 5월 5일 채택 후 5월 12일 상업성은 ‘시장관리운영세칙’을 공표했다.

⁵⁸ 공식적으로는 ‘지방예산과 균중적 자금원천을 동원’(2003.5.5 종합시장설치 지시문)한다고 하지만, 청진시의 경우 시장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입주 희망자들에게 일정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데일리NK』, 2005년 1월 24일.

⁵⁹ ‘종합시장내 판매대의 5%는 공장, 기업소에 우선배정했다.’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⁶⁰ 신동철, ‘상업조직과 기술의 발전은 상업시설의 현대화, 문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002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35-36.

시장설치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가격’을 인정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가격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북한은 ‘가격의 일원화 원칙’⁶¹에 따라 국가의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제정 권한을 가지고, 직접 가격의 표준과 기준가격, 가격제정방법과 절차를 규제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협동경리, 수공업품, 8·3인민소비품, 개인부업 생산품 등 계획외 생산된 소비품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시장가격의 적용을 인정해왔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전후 시기 시장가격, 가격자유화에 대한 맹렬한 거부감⁶²과는 달리 7·1조치 이후 북한은 시장가격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다. ‘가격의 능동적 조절’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장가격과 국가계획 가격 사이의 괴리를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7·1조치가 ‘가격개혁’이라는 평가를 얻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기도 했다.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생산자를 우대하는 원칙에서, 이번에 가격을 전반적으로 개정했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격사업을 옹계 실행하지 않아 나라의 경제사업에 전반적으로 중대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대중소비품과 식료품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 수준에 맞춰 개정하였다.⁶³

가격공간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가치법칙의 본래의 기능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값은 높아지고 반대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은 상품의 값은 낮아지는 것이 가치법칙의 작용밑에 이루어지는 가격의 운동법칙이다. 가격운동의 이러한 법칙은 가격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⁶⁴

가격공간의 적극적 활용은 북한의 가격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국정(계획)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이중가격제 체계에서 국가 계획영역의 국정가격,

⁶¹ 북한의 가격 일원화원칙은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 『국가가격부서를 내오며 가격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부장, 국장들과 중앙은행 총재에게 준 지시, 1946.11.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가격규률을 엄격히 세울 데 대하여(북조선인민위원회 기획국, 재정국, 산업국, 상업국 국장들에게 준 지시, 1948.7.3),” 『김일성전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121-123.

⁶²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개혁>, <개방>의 간판 밑에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를 사적소유로 전환시키고 국가의 유일가격제정원칙을 거세하고 <자유시장가격론>을 끌어들이으로써 경제의 자유화,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나섰다.” 김순철, “<수요공급설>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5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51.

⁶³ <7·1조치 강연자료>(2002.7),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2003), pp. 40-45. 원제는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조선로동당출판사)>

⁶⁴ 김원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2008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40-41.

시장영역의 시장가격, 그리고 계획과 시장의 중간영역인 행정지도가격 성격의 한도가격 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한도가격은 기존의 국정가격의 계획성과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⁶⁵

시장을 열어주고, 가격제정 자율권을 확대했지만, 시장에 가격결정의 모든 권한을 넘기지 않는 정책적 줄타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표 5> 7·1조치 이후 북한의 가격 형태와 가격관리체계 변화

가격형태	가격최종결정권	가격동향	제정원리	계획화 정도
국정가격	국가가격제정국	고정가격	원가	계획가격
한도가격	가격제정국+관할 인민위원회	변동가격	원가+수요·공급(+국제시세+환율)	행정지도가격
시장가격	시장	자유가격	수요·공급	합의·경쟁가격

출처: 김일환,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p. 133.

3. 계획과 가치의 공존 그리고 긴장관계

2000년대 중반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고민은 계속되었다. ‘변화된 현실조건’을 타파하기 위해 허용한 가치법칙의 확대 적용과 시장의 도입은 일정한 ‘경제적 효과성’을 가져왔지만,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시장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현상들은 사회주의제도의 고수를 통한 경제정상화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로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계획과 시장 사이의 타협과 견제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제관리방식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실리중심의 경제관리방식(정책)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집단주의, 계획경제라는 원칙과의 타협을 요구받은 것이다. 원가, 리운 등을 중시하는 계획사업 체계가 “집단주의” 이데올로기의 견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선행의 원칙, 자립의 원칙, 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 공고발전, 계획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들은 경제건설에서 반드시 틀어쥐어야 할 중요원칙들이다. 사회주의경제제도(생산관계, 필자)를 고수하는 것은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원

⁶⁵ 한도가격의 성격, 기능, 역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일환,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pp. 132-145 참조.

칙을 지키기 위한 근본전제이다.⁶⁶

가격, 리윤, 수익성 등의 수단들이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실현하는 구성요소로 재규정되었다. 즉 사회주의 과도기적 경제관리 방법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집단주의 원칙’(사회주의 경제제도)하에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 가치법칙, 독립채산제, 가격, 원가, 리윤, 수익성 같은 경제법칙들과 경제범주들도 반드시 집단주의적 원칙을 더 잘 실현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리용”⁶⁷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의 사회경제적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⁶⁸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더불어 계획경제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시장’과 ‘화폐’도 견제를 받았다.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반한 계획경제와 개인소비품의 일부만이 판매되는 지역시장의 결합은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 시장가격은 생산물가치에 관계없이 수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조절되지만, 국영기업소 생산물가격은 생산물의 가치와 수요에 의해 계획적 안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⁹

오늘 우리 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자유판매를 실현하는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된 일부 생산물이 교류되는 물자교류시장과 개인소비품의 일부만이 판매되는 지역시장만이 있을뿐이다.⁷⁰

2009년 리원경의 화폐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그동안 가치법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회주의경제에서 계획성의 원칙과 상품성의 원칙은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⁶⁶ 류운철, “당의 령도와 국가적지도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 『경제연구』, 2006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11-12.

⁶⁷ 리승필,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방법,” 『경제연구』, 2006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11.

⁶⁸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12-13.

⁶⁹ 위의 글, pp. 12-13.

⁷⁰ 위의 글, pp. 12-14.

작용한다...어려운 경제적조건을 손쉽게 타파하려고 화폐공간을 경제관리의 기본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가치적공간의 지위와 역할을 과대평가한데서 나오는 그릇된 편향인 것이다. 화폐, 화폐유통을 <사회적 재생산의 기초>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국가가 화폐유통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 <재생산과정을 주동적으로 조절통제할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심한 우경적 견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⁷¹

화폐, 화폐유통을 <사회적 재생산의 기초>이며 <재생산과정을 주동적으로 조절통제할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가치법칙의 이용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상대방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주장이었다. 리원경의 보수적 경제관리방식과 더불어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국영)기업소’의 자율성도 문제 삼는 견해가 공간문헌을 통해 발표되었다. <독자성>과 <자립성>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높이고 <독자성>과 <자립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경제관리 기업관리를 풀어놓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아랫단위들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랑비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를 지킬수도 없고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킬수도 없다.⁷²

리원경과 김경희의 완고한 경제관리방식에 대해 리동구는 ‘과도기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철저히 실현하면서 가격 등의 수단을 보충적으로 이용’⁷³한다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가치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가격공간은 물질적자극을 통하여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 생산경영활동을 실리

⁷¹ 리원경, “화폐, 화폐유통은 계획적경제관리의 보조적수단,” 『경제연구』, 2009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39-42.

⁷² 김경희,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의 강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9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4.

⁷³ 리동구는 그러나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약화시키는 사소한 방법이라도 허용되면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가 허물어지고 사회주의자체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적 소유원칙과 독립채산제 기업소에서 가격공간의 활용범위 확대를 분리하는, 즉 제도와 방법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리동구, “사회주의원칙을 옹기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 『김일성종합대학보 철학-경제학』, 2008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 52.

(강조, 필자)가 나도록 조직진행할수 있게 한다.···가격공간이 인민생활향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공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생활비와 함께 가격공간이다.⁷⁴

리동구는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이 ‘물질적자극’ 즉 ‘실리’를 얻어야 ‘생활비’를 높일 수 있고, ‘가격’을 낮춰야 인민생활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국영기업소’의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성격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과 함께 다소 중립적인 주장도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었다. 박흥규는 ‘경제적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과대평가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한다고 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마치도 그것이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수단으로, 기본방법으로되는것처럼 여기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⁷⁵

V. 결론: 북한과 중국의 가치법칙 활용의 차이

북한과 중국은 각각 사회주의 과도기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근거로 가치법칙을 재구성, 활용하는 실용적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의 동질성에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가치법칙 활용에는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치법칙 발생의 한 원인 즉, ‘소유문제’였다. 소유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유연했다. 중국의 소유문제에 대한 결론은 형식적인 국유화에 기초하여 생산단위에 가격 결정권, 즉 생산물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을 부여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서의 국영기업”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였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면 일정한 부분에서 소유권의 유연한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력 축소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사영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공유경제와 사유경제가 공존하는 경제체제를

⁷⁴ 리동구, “가격공간을 옹계 리용하는것은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10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 78.

⁷⁵ 박흥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공간의 리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년 3호, p. 80.

구축했다.⁷⁶

국유기업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소유제를 변질시키기는커녕 그것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 사회주의 국가소유제에서 국유기업이 필요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 되는 것, 이는 바로 사회적 생산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고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해내어 그 경제효의 제고를 촉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소유제의 공고화와 발전에 유리한 것이다.⁷⁷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시장을 자본가 없는 상품유통 공간으로서의 비조직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계획의 보완재, 계획과제의 경제적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가치지표의 활용 등 가치법칙 활용의 가능성은 강조하지만, 소유의 문제에서 만큼은 매우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즉,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위한 전면적인 가치법칙의 조절작용을 거부하며, 기업의 자율적 가격결정권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 문제가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까지 지속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 즉 사회주의적 소유는 버릴 수 없는 원칙인 것이다.

소유 <다양화>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소유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국가소유>, <협동소유>, <집단소유>, 그리고 <공민소유> 등 각이한 명칭을 띤 소유형태들이 생겨나고...사적소유와 그 변종들이다...소유관계의 성격은 경제관리체제와 방법을 규제한다. 결국 소유제도에 의하여 경제관리 원칙과 체제, 방법이 규정된다.⁷⁸

⁷⁶ 박변순, 『중국기업 대해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p. 33 참조;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는 중국식 체제전환으로 인식케 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체제내 개혁을 뛰어넘는 체제전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적 특징인 ①'생산수단(토지와 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 형태와 ②계획시스템의 결정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중국은 개혁 초기부터 소유형태에서 중요한 변화(농지의 사실상의 사유화, 개인 자영업의 허용, 사유기업의 발전 등)가 발생했고, 개혁과정에서 이런 경향이 점점 심화되어 오늘날에는 국유보다는 사유형태가 지배적인 소유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코르나이(Kornai, 2005)는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공산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목상의 이념과는 상관없이 실제의 통치행동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에 친화적이라면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Kornai, J., "Socialism and the Market: Conceptual Clarification," A Paper presented to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Round Table on "Market and Socialism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s of China and Vietnam," January 14-15, 2005; 김석진,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서울: KIET, 2008), p. 28 재인용.

⁷⁷ 馬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pp. 150-151.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확립되어 여러 형태의 동산 및 부동산들이 국가적소유로 되어있다. 국가적소유의 모든 재산형태들이 사회공동의 리익과 대치되는 개인의 리익, 개별적단위의 리익실현에 리용되어서는 안된다.⁷⁹

북한 지도부의 사회주의 제도, 즉 소유문제에 대한 완고한 인식은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정치경제적 불황에 대한 경계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주의 배신자들에 의한 소유의 사유화, 민영화”가 “사회주의경제를 착취관계와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변모”⁸⁰시킴으로써, “사회주의시기에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실업과 사회적불평등, 생활수준의 저하, 세금의 증대, 사회적보호제도의 파괴 등 온갖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백만장자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은 극도의 빈궁과 기아”⁸¹로 내몰았다는 것이다.⁸²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가치법칙에 대한 다른 입장은 현실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계획과 시장을 병행하면서 과거보다는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자원 분배에 대한 가치법칙의 조절작용 허용의 폭에서 큰 차이를 빚고 있으며, 국가의 가격 결정권 여부나 사적 소유권의 허용문제에 있어 크게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지만, 경제영역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실현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고수를 위해 계획을 중심으로 시장 등 가치법칙을 부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제의 지속적 유지를 실현하였지만, 경제적 위기국면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속도 역시 매우 더딘 양상이다.

결국 북한이 계획 우위의 가치법칙 활용이라는 전인미답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강성대국 건설의 과제를 승계한 김정은 체제 역시 경

⁷⁸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46.

⁷⁹ 류영철, “현시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개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보 철학-경제학』, 2009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p. 60-61.

⁸⁰ 박금옥, “소유<<다양화>>와 반인민적자본주의시장경제의 복귀,” 『경제연구』, 2001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56.

⁸¹ 김원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여러 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특징,” 『경제연구』, 2000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45.

⁸² 전환불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에 대해서는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pp. 58-61 참조.

제실적에 대한 조바심과 인내심의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치법칙은 양날의 칼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로 잘 쓰면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7·1조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서 북한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법칙의 활용범위와 방법에 대한 창조적 접근일 것이다.

■ 접수: 04월 16일 ■ 심사: 05월 18일 ■ 채택: 06월 04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인덕 편. 『개혁과 개방-중국주요논문선집』.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8.
- 강택민. 『당 건설에 대하여』. 북경: 민족출판사, 2002.
- 김석진.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서울: KIET, 2008.
- 김진환. 『북한위기론』. 서울: 선인, 2010.
- 류상영 외. 『국가전략의 대전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 박변순. 『중국기업 대해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배진영. 『구동독의 가격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서울: KIEP, 1991.
-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서울: 선인, 2009.
- 정광수 역.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서울: 과학과사상, 1990.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 최청호 외.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 칼 마르크스, 강신준 옮김. 『자본 I-1』. 서울: 길, 2008.
- 퇴경연구실 편. 『현대사회주의경제의 쟁점과 전망』. 서울: 풀빛, 1991.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김일성전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정일.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당력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_____.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馬 洪. 『論社會主義商品經濟』.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Marx, Karl. *Das Kapital*. MEW, 1867.

L.I.아발킨 외 지음.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소련공산당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 모스크바: 뮌슬리 출판사. 1986. 배순근 옮김. 『현대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서울: 태암, 1989.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 Allen & Unwin, 1982.

2. 논문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정호. “중국 사회주의 이해와 전망.” 『활동가 북경위크숍』. 세세상연구소, 2011.

박순성.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동아연구』. 33집, 1997.

임강택. “사회주의 경제의 가치법칙 연구: 북한의 가치법칙을 중심으로.” 『민족발전연구원』. 논문집, 1998.

김일성. 『국가가격부서를 내오며 가격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1946.11.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강응철.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경희.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의 강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9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순철. “<수요공급설>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5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원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여러 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특징.” 『경제연구』, 2000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원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2008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2003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류영철. “현시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개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보 철학-경제학』, 2009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류운철. “당의 령도와 국가적지도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 『경제연구』, 2006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동구. “가격공간을 옹계 리용하는것은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10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_____. “사회주의원칙을 옹계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 『김일성종합대학보 철학-경제학』, 2008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명서. “사회주의 재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규정하는 지표들과 그 리용.” 『경제연구』, 199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한 물질적 기초.” 『경제연구』, 1998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명호. “경제관리와 경제제도의 연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 견해의 반동성.” 『경제연구』, 1998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상우. “상업의 최량성규준과 그 리용.” 『경제연구』, 1999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순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종자에 관한 사상은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경제사상.” 『경제연구』, 2007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승필.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방법.” 『경제연구』, 2006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시하신 불멸의 령도업적.” 『경제연구』, 2005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번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원경. “화폐, 화폐류통은 계획적경제관리의 보조적수단.” 『경제연구』, 2009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경옥. “리운분위를 배격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996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금옥. “소유<<다양화>>와 반인민적자본주의시장경제의 복귀.” 『경제연구』, 2001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선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완성에 관한 독창적 리론.” 『경제연구』, 2005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홍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공간의 리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년 3호.
- 신동철. “상업조직과 기술의 발전은 상업시설의 현대화, 문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002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번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200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천영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2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한득보. “사회주의적 생산의 집약적 발전에서 생산의 효과성 범주.” 『경제연구』, 1992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원칙적문제.” 『경제연구』, 200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 기타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 10월호, 2003년 1월호, 2004년 12월호.

『데일리NK』.

『조선신보』.

Abstract**Economic Reform Controversy in North Korea: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 Comparison to China -**

Il-Han Kim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for the socialist states' economic reform. Following the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North Korea utilized a wide range of the 'Law of Value.'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 1990s, the 'Law of Value' debate maintained strained relation between social ownership of means of production as the original reform of the socialist economy and by using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such as price, benefit and economic efficiency, in North Korea.

Otherwise,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1978, the government reinterpreted the law of value and used this principle for the economic reform. In particular, China's socialist commodity economy induced economic development as the flexible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and ownership.

However, North Korea maintained the social ownership of means of production. It is the main value of the re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value will be the touchstone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Key Words: Law of Value, Value, Use Value, Exchange Value, Socialization of Means of Production, Social Division of Labour, Socialist Economic Reforms, Transformation Recession